

남북 관계 긴장 고조 원인과 현안 과제

송대성 / 세종연구소 소장

문제 제기

북한은 강도 높은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면서 한반도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북한의 남북 관계 긴장 조성 행위는 2009년도에 접어들면서 더욱 그 강도를 더 하고 있다. 남북 정치·군사 부문의 모든 합의 무효 선언과 1991년 기본합의서 및 NLL 무효 선언(09. 1. 30), 개성공단 차단 및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남한 근로자 1명 억류(09. 3. 10), 로켓 발사 실험(09. 4. 5), 북한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항의하여 북한의 6자회담 탈퇴, 불능화 시킨 핵시설 원상 복구와 핵개발 속개 선언(09. 4. 14), 제2차 핵실험 및 6발 미사일 발사(09. 5. 25~26),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09. 5. 17), 유엔결의 1874호 거부 및 농축 우라늄 작업 착수, 새로 추출되는 플루토늄 전량 무기화, 선박 검색 등 봉쇄시 군사적 대응(09. 6.13) 등으로 이어지면서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반도 긴장 상태가 고조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북한이 왜 이렇게 남북 관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긴장 고조와 관련하여 우리의 현안 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논하고자 한다.

남북 관계 긴장 고조 원인

현재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의 긴장 고조는 북한이 1차 주역이다.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원인은 ① 김정일 국방위원장 정권의 상징력(symbolic capability) 증대, ② 조속한 북-미 대화 촉구, ③ 한국에서 남남갈등을 고조시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폐기시키기 위해, ④ 군사제일주의 고수 등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북한 정권은 전 국민들에게 그들 지도자들의 상징력을 이상화하면서 통치하고 있는 정권이다. 그런데 근래에 북한 정권을 이끌고 있는 김정일 위원장의 상징력이 점점 약화되어지면서 주민 통제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점들을 갖게 되었다. 김 위원장 정권의 상징력을 약화시킨 요소들은 남한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 차단으로 인한 북한 경제난 가중 및 북한인들의 불평 고조, 작년 여름 건강 문제로 김 위원장의 수 개월 동안 공·사석 실종, 남한 거주 북한 탈북자들의 전단 살포 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 북한은 근래에 약화된 김정일 위원장의 상징력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서 남한에 대한 적대감을 증대시키고 긴장감과 위기감을 고조시키면서 북한 국민들로 하여금 지도자 김정일 위원장을 중심으로 대동단결하여야 한다는 집단 심리를 유발케 하는 수법으로서 남북 관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 집권을 계기로 미국과 조속한 대화를 시작하여 소위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을 성공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북한은 통미봉남 정책을 통하여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 자격 인정 획득, 주한 미군 철수 합의, 한미 동맹 약화·폐지 합의 등 북한의 한반도 통일에 절대 절명의 중요한 목표들을 설정하여놓고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추진 계획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에 대한 저의를 간파하고 북한의 의도대로 쉽게 응하여주지를 않았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진정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검증 가능하게 제거할 준비가 돼있다면(genuinely

prepared),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북한 관계를 정상화할 용의가 있다(willing to normalize)”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조속한 대화 촉구에 응하지를 않았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에 초조감을 느낀 북한은 미국과 조속한 대화를 촉구하는 수단으로서 긴장 고조 카드를 뽑아들었다.

북한 김 위원장 정권은 이명박 정부가 천명한 대북 정책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폐기를 위해 각종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강경하며, 그 강경함 때문에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있다고 소위 남남갈등을 고조시키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난하고 있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때문에 남북 관계가 긴장되고 있다고 선전하면서 남북 관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 김위원장 정권의 지상지고(至上至高)의 국가경영철학은 ‘군사제일주의(선군정치: Military First Policy)’ 고수다. 군사제일주의 이론에서 북한 군사력의 3대 전략적 목표는 “① 한반도 통일의 원천력, ② 북한 정권 옹호력, ③ 북한 정권의 협상력” 등이다. 북한이 세계적인 비난을 무릅쓰고 로켓 실험을 감행하고,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들의 군사제일주의를 추구함에 무엇보다도 양보할 수 없는 군사력의 실질적 증강이라는 목표 획득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현안 과제

북한이 본격적으로 단행하고 있는 남북 관계의 긴장 고조와 관련하여 우리가 조치하여야 할 당면 현안 과제들은 ①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 ② 남남갈등의 해소, ③ 한미 동맹 결속 강화에 의한 완벽한 방위체제 구축, ④ 한국의 자위권 차원 안보 역량 강화 등 4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

북한 관련 이슈들을 다룸에 있어 근본 중 근본은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다. 북한 정권의 속성 파악이 정확하지 않는 경우, 북한을 상대로 마련한 대책은 합

리적인 것이 될 수가 없다. 현재 북한 김 위원장 정권의 객관적 실체는 ‘합의 사항의 일방적 파괴성’ 과 ‘국제적 룰(rule) 비준수성,’ ‘군사제일주의 불포기성,’ ‘연방제 통일방안 불포기성’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북한 실체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며 국민들이 정확하게 공유하여야만 하는 요소다. 정책 입안자들이 북한의 실체에 대한 객관적인 공통 인식을 공유하여야만 합리적인 대북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다.

안보와 관련하여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남남갈등 현상은 그 대부분이 진정한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견해들 간의 갈등 수준을 넘어 일부에서는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을 훼손시키려는 견해도 존재한다. 국가의 안보 정책 결정에 이적성 주장들이 투입되어서는 안 되며, 남남갈등의 문제는 안보 문제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논의로 변질되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보유에 의한 남북한 군사력의 불균형, 공격성 위주의 북한 군사력 등을 고려할 때 한미간 동맹 결속 강화는 진정한 한반도 평화 유지와 한국 방위를 위한 필수 요소들이다. 특히, 남북한 간 합의 사항 및 유엔 결의 등을 위반하는 북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장 실질적인 대응책은 한미동맹 결속 강화에 의한 완벽한 한국 수호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한미공조적 대응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21세기 한미전략동맹’ 의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최대한 내실 있게 마련하고 실천하는 일이다.

2008년 4월 16~19일 간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3가지 내용들과 관련된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 내실 있게 마련되고 실천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 과제 중 하나다. 그 3가지 내용은 ① 상호 공유하는 가치와 이익의 공감대를 공고화하는 가치 동맹 추구, ②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한미 상호간 관계를 확대 심화하는 신뢰 동맹 추구, ③ 한반도, 동북아, 다자질서, 국제안보를 포함한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전략적 이익 공유를 도모하는 평화 안보 동맹 추구 등이다.

북한의 남북 관계 긴장 고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한국 자위권 차원의 안보 역량을 강화하여야만 한다. 한국의 자위권을 위한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현안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① 미국의 핵우산 강화 및 제도화, 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 한시적 중단, ③ 한국의 전략적 대응 능력 강화, ④ 한국형 미사일의 적극 개발, 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참여 회원으로서의 적극적 활동, ⑥ 국제동맹전략군 창설 및 운용 등 중요한 과제들이 있을 수 있다.

미국의 핵우산 강화 및 제도화는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추구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시급한 대응책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의 한시적 중단은 북한의 위협 증대에 대한 대비책이다. 전략적 대응 능력이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방어적·응징적 대응 능력을 의미한다. 한국형 미사일을 개발해야 하는 이유는 북한이 이미 대륙간 탄도탄 개발을 상당히 완성하였고 지속적인 개발을 천명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국은 자위권 차원이나 남북한 군사력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안 과제다. PSI 회원으로서의 활동은 북한을 겨냥한다기보다는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테러방지 등 국제 협력 차원에서 불가피한 현안 과제이다. 또한 국제동맹전략군 창설 및 운영은 새로운 21세기 한미전략동맹에 상응키 위한 현안 과제다. **2009**